

비난의 정치를 넘어, 사회를 바꿀 질문

- 세월호 참사 9주기에, 이태원 참사를 생각한다

박상은(재난사회학자)



“왜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만큼 여론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지난 3월,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다. 이 답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는 모든 일에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정부 주도의 재난 서사와 책임 회피 작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대응의 후과 속에서 찾게 된다.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매년 잊지 않겠다고 외쳤는데, 참사는 반복되고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정부의 대응도 반복되었다. 참사 직후 정부대응에 대한 분노가 작지 않았음을 생각해보면, 이 침묵은 일종의 무력감의 표현으로 느껴진다. 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이태원 참사에 걸맞은 질문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9년, 이태원 참사를 생각한다.

유사한, 그러나 다른 두 참사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8년 6개월의 시차가 있고, 진도 앞바다와 서울 도심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선박침몰과 군중밀집이라는 원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재난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 특히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정부기관이 임무를 방기해서 큰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과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와 전가를 위해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겹쳤다.

그러나 일견 유사해보이는 지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이 차이들을 명확히 짚으면서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두 참사는 ‘골든타임’에 국가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골든타임’의 시점은 다르다. 희생자들이 구조를 요청한 ‘결정적 시간’을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는 구조 요청 이후의 101분(혹은 88분)¹이 중요했다. 이태원 참사는 구조 요청 3시간여 전(18시 34분) 혹은 최소 1시간 20여 분 전(신고가 몰린 9시 전후)가 중요했다. 압사사고는 압박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짧는데 비해, 인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세력이 사건 발생 장소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즉 경찰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세월호 참사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태원 참사보다 기술적인 쟁점이 많았다. 증거 확보의 지연, 기술 논쟁 해결의 어려움 등 원인 규명에 있어서 여러 곤란이 있던 데다가 ‘인양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과학적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힘을 가졌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골목에 설치된 CCTV 등 검·경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보이고, 참사를 촉발한 순간이 세월호 참사만큼 의문점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좁은 골목에서 몇 십 여분 간 15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소위 ‘군중유체화’² 현상을 온전

¹ 골든타임을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신된 시각(10시 17분)으로 계산하면 88분, EPIRB 신호가 발신된 10시 30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1분이다.

²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면서 군중 전체가 의자와는 무관하게 물에 휩쓸린 것 같이 움직이는 현상

히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대체로 밝혀질 것은 밝혀졌다는 착시로 이어진다. 희생자들의 마지막이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현장에 있었지만 자신이 겪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생존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하는지 진상규명의 쟁점을 모르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큰 고립감을 안겨준다. 천천히 가보자고 하기에, 매일의 상처는 구체적이다. 게다가 재난조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쟁점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택하기 쉬운 선택지는 분노의 대상이 될 책임자를 특정하고, 극적인 서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이태원 참사를 고민할 때, 가장 큰 화두는 이것이다. 어떻게 다음 참사를 막기 위한 ‘재미없는’ 질문을 가져갈 것인가?

비난의 정치와 구조를 바꿀 질문 사이에서

한국에서 재난 이후 비난의 정치는 크게 두 축에서 작동한다. 첫째는 말단으로 책임을 돌리는 비난의 정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장이 구조 실패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졌으며, 승객을 버리고 도주한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태원 참사 직후, ‘압사’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그러나 최소한 세월호 참사 이후 말단을 향한 비난의 정치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는 것 같다. 주로 책임 회피와 전가를 위해 일선 책임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난의 특성 역시 고려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123호 정장과 세월호 선장·선원의 잘못이 워낙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가 상위책임자의 책임회피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일선 경찰관이나 일선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이 즉각 일어났다.

두 번째 비난의 정치의 축은 최상층 책임자를 향한 책임 추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말단에게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데다, 권력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문제는 책임 추궁의 욕망이 사실관계를 선정적으로 해석하고, 추가적인 재난조사의 길을 막고, 재발을 막는 데 필요한 질문을 잊게 만들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양날의 검이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재난대응에서 왜 대통령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힘으로써 재난대응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보다 선정적 의혹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극적 서사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황해문화에 실린 글은 “참사 전부터 현장에서 걸려온 112 신고 전화가 무려 120여 건”이었으나 국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³ 잘 알려져 있다시피 10월 29일 당일 저녁 6시부터 10시 15분까지 ‘압사’를 경고한 112신고는 총 11건이었으며, 120여 건의 신고 전화는 10시 15분 경부터 11시까지 신고된 건수다.⁴ 올해 2월 한겨레 ‘왜냐면’에는 ‘왜 2022년 헬러윈에만 인파관리 대책이 없었는가’라며 서울경찰청이 2017년부터 ‘헬러윈 인파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왔고, 2020~2021년에 경비기동대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들며 2022년이 유독 특수했음을 강조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까지는 인파 밀집에 잘 대비했으나 2022년에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이전에도 경찰은 인파가 도로로 밀려 나오지 않는 교통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2022년과 유사하게 유흥시설 단속, 범죄 예방, 방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³ 전지윤. 2023. “10·29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일곱 가지 질문.” 황해문화: 224-239.

⁴ 한겨레. 2022.12.28. “이태원 컨트롤타워 없던 1시간…112 신고 120건 빗발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며 놀랄 사실들, 충격적인 사실들은 잠시 관심을 환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재난조사의 질문은 이렇게 구성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 수많은 신고를 무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작년까지는 제대로 하다가 올해는 안 했지?’라는 질문 뒤에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지 말았어야지’하는 규범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중요한 증언을 핑계로만 취급하기 쉽다. 재난조사의 임무는 ‘어째서 이 신고들이 무시되었는지’를 충분한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압사위험을 경고한 신고를 포함하여 29일 18시부터 10시 15분까지 이태원 파출소에 배정된 112신고는 총 93건이라고 한다.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28일에 인파 밀집을 우려한 유사한 신고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토요일 변화가에 위치한 파출소에는 항상 신고가 집중될 것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한정된 인원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의 위계를 설정해 대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난조사의 질문은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범인 찾기를 위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보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현실에서는 절대적 악인 없이, 극적인 서사 없이 재난이, 폭력이, 참사가 만들어진다.

어떤 사회를 상상할 것인가

책임 추구를 위한 질문이 항상 민주적, 긍정적 재발방지대책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10.29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질문 중 하나는 “왜 경찰기동대를 축제 장소에 배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다. 경찰기동대가 집회 장소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이 위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은 분명 축제에 참가한 시민의 안전보다 체제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경찰기동대가 왜 축제에 없었느냐”는 질문은 앞으로 축제 때는 경찰기동대를 적극 배치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기 쉽다. 적정 수의 기동대가 필요하겠지만,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기동대를 충분히 배치한다’는 충분한 답이 되

지 못할 것 같다. 아무도 축제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다수의 경찰기동대가 도열해있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경찰이 왜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는 문건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보경찰이 적극 활동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혹은 ‘안전사회’라는 말이 긍정적 의미, 또 시민의 권리로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안전’은 다의적 용어다. 세월호 참사 이전 한국에서도 ‘안전사회’는 범죄를 사회의 대표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형법을 강화해 ‘사회 안전’을 달성하겠다는 보수적인 담론이자 사회 통제를 위한 상징적 구호였다. 또한 2001년 9.11테러 이후 ‘안전’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안전사회’를 위한 요구는 언제든 보수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질문을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는 지자체에 지역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질문을, 경찰에는 조직이 중시해 온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안보실에는 긴급구조국면에서의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과제가 주어졌다. 재난은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가시화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응답 역시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라는 요구를 넘어,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제안이어야 할 것이다.

좋은 생각이 성공한 정책이 되지 못한 이유

- 2022년 칠레 개헌안 부결의 의미 -

박윤주 교수(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친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의 결말은 2020년 10월 26일 국민투표로 개헌이 결정되면서 해피엔딩인 듯 보였다. 77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78%가 개헌에 찬성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결정이었다. 기존 국회의원이 제헌의회의 50%를 구성하는 안은 부결되었고, 새로운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칠레 시민들은 피노체

트 군사 정권과의 완벽한 결별을 의미하는 새 헌법은 기존 정치 질서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주체들이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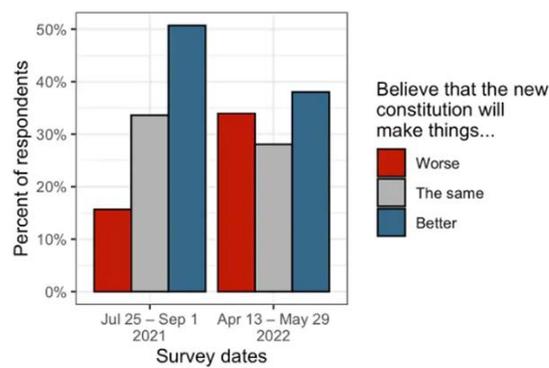
이듬해 5월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결과는 칠레 시민들이 어떤 ‘새 부대’를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총 155석 중 17석이 원주민에게 할당되었다. 원주민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현 헌법이 바뀌어야 할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는 선택이었다. 당선된 155명

의원 중 77명이 여성이었다. 사회개혁 요구 시위 내내 피노체트 군사 정권의 잔재가 남긴 폭력과 억압에 저항했던 여성계의 목소리가 새로운 헌법에는 잘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었다. 정부 여당 소속 의원은 불과 37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정부 여당이 개헌안에 대한 부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소속 정당을 분석해 본 결과, 독자 노선을 천명한 후보가 무려 47명이나 당선되면서 원주민 그룹 소속 17명과 함께 제헌의회의 성격을 더욱 개혁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환경운동 단체, 성소수자 단체, 교육 및 보건 분야 등을 대표하는 이들이 선출되어 칠레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제 사회도 이 제헌의회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칠레의 시도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양성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제헌의회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개헌안은 2022년 9월 4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무려 62%가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 칠레 개헌 과정을 쫓 지켜본 이들에게 개헌안 부결 소식은 그다지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번 개헌안에 대한 칠레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에 소개된 칠레 공공연구소(Centro de Estudios Públicos)의 여론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이 연구소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개헌이 칠레인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답변의 선택지는 ‘나빠질 것이다’, ‘변함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선될 것이다’의 세 개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조사에서는 답변자의 50% 이상이 새 헌법은 그들의 삶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

만 2022년 조사에서 새 헌법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은 40% 밑으로 떨어진 반면, 개헌으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한 이들이 10%에서 35% 정도로 늘어났다. 개헌안에 대한 기대가 1년 만에 우려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였다.

<그래프1. 개헌과 삶의 개선에 대한 인식 변화>



<출처: The Washington Post(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2/09/16/chile-constitution-mandatory-voting/>>

수많은 언론이 칠레의 개헌안 부결 소식을 전하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가장 쉬운 분석은 급진적인 개헌안의 내용에서 부결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헌법 조항이 무려 499개나 되었는데, 여기에는 공기업 구성원 남녀 동수, 난민 강제 추방 금지, 임신 중단 보장, 성 정체성 선택권, 자연과 동물에 대한 헌법적 원리 등 매우 추상적이고 급진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저항이 심했다는 것이다. 내용과 무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칠레 언론 지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칠레의 언론들은 개헌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구성원들을 꾸준

히 공격하며 개헌안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마추어 사회운동가들이 만든 황당한 주장으로 낙인찍었고, 개헌안의 내용과 동떨어진 정보들이 여과 없이 유통되면서 개헌안이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부분적으로 정확하지만, 부결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개헌안이 급진적이었기에 부결되었다는 분석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분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칠레의 2019-2020 사회개혁 요구 시위에서 제시된 주장들을 살펴보면 개헌안의 내용이 특히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헌안의 내용은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들이 칠레의 거리에서 외친 구호들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시력을 잃었던 개혁 요구 시위의 결과 탄생한 개헌안이라면 당연히 좀 더 강력한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그때는 급진적이었으나 성공하였고, 지금은 급진적이어서 실패했다는 분석은 어색하다. 개헌안 부결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고자 한다면, 그때는 왜 급진적이었는데도 성공했으며, 지금은 왜 그 급진성이 발목을 잡게 되었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급진성’ 자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타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개혁 요구 시위 당시 칠레 언론은 시위 세력을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은 폭도들로 몰았었다. 하지만 칠레 시민들은 보수 언론을 조롱하며 시위대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갑자기 칠레 시민들이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에 속아 개헌안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증거도 근거도 희박하다.

나는 앞서 사회개혁 요구 시위를 분석한 글에서 사회개혁 요구 시위의 성공이 사회개혁 세력의 성공적인 전략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같은 분석틀로 개헌안 부결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냈던 칠레의 사회

개혁 세력은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거리에서는 성공하고 국회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2019~2020년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는 다양한 시위대의 주장이 칠레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거대한 사회적 요구로 승화되는 과정이었다. 성평등, 환경권 보장, 원주민 권리의 회복, 다양한 차별과 혐오 철폐의 요구는 이러한 가치들을 막아서는 피노체트 군사 정권의 잔재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로 승화되었다. 피노체트 독재 정권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 쓰일 헌법에는 칠레 시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여러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생각들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제헌 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고, 칠레 시민들은 그들에게 투표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제헌의회 구성 이후 나타났다. 칠레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제헌의회 입법 의원들은 분야를 넘어 소통하지 않았다. 각각 스스로가 대표하는 사회 분야의 요구를 개헌안에 담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 환경 분야의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은 원주민들의 권리에 관한 안을 작성하는 이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성평등을 담당하는 의원들은 노동을 담당하는 의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었다.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 대하여 가장 훌륭한 개헌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모두가 함께 고민한 일관성 있는 개헌안 도출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각의 분과 내에서조차 소통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아쉬운 것은 소수이긴 하지만 보수적인 시각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개헌안 작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몇몇 의원들은 개헌안 부결 이후 보수성향의 입법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더라면 개헌안을 좀 더 수정하여 부결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며 후회하였다. 거리에서 표출된 더 다양하고 더 급진적인 요구도 칠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의 의제로 묶어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던 칠레의 개혁 세

력은 막상 개헌안 작성의 과정에서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듯했다. 여러 사회개혁 세력들이 조각조각 각자 만들어 낸 개헌안은 거대한 대의를 대표하는 개헌안이 아니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에 담기에 급급했던 시도로 폄하되었고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결국 칠레의 개헌안은 부결되었으나, 유토피아적인 개헌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좋은 생각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좋은 생각이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한 분야에서의 좋은 생각이 다른 분야에서의 좋은 생각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가 공감하는 좋은 생각이 그 사회 모두의 좋은 생각으로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좋은 생각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믿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레 개헌안 부결은 좋은 생각이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유통될 때, 다른 좋은 생각과 만나지 못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 좋은 생각을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생각을 나누지 못했을 때, 아무리 좋은 생각도 성공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좋은 생각을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칠레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 개헌안 부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칠레 국민의 76%가 개헌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리치 대통령은 개헌안 부결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내고 개헌을 위하여 정당들과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정당들도 곧바로 협상 절차를 시작하며 개헌 절차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시 개헌 절차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선임한 전문가들이 작년 말 국회에서 합의된 12개 분야에 대한 1차 개헌안을 3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작성하기로 하였다. 법률 지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

난 제헌의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4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의 활동을 모니터한다. 시민들은 5월 7일 50명의 입법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의회를 다시 선출하는데, 이 제헌의회는 전문가들이 6월까지 만든 1차 개헌안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한다. 최종 개헌안은 12월 7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제헌의회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개헌 과정에 비하여 이번 개헌의 과정은 좀 더 제도적이라는 평가받는다. 혹자는 개헌의 과정이 보수화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새로운 개헌 절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전문가위원회의 의장으로 중도좌파 정당이 추천한 무당파의 베로니카 운두라가라는 변호사가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선출이 좋은 생각을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칠레가 2019년 거리에서 시작된 개혁의 노력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법으로 극복하는 실험 그리고 좋은 생각을 성공한 정책으로 만드는 노력에 칠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칠레의 노력은 그래서 고마운 사건이다. 부디 칠레가 거리에서 외쳤던 수많은 좋은 생각들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좋은 헌법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3회에 걸쳐 칠레의 개헌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칠레의 소중한 노력을 행여 부정확하게 전달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사 독재와 민주화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뚫고 사회개혁 요구 시위를 일궈낸, 그리고 그 결과물인 개헌을 목전에 둔 칠레로부터 지금의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3회에 걸쳐 지면을 허락해주신 <진실의 힘>에 감사하며 저자의 확신이 독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소망한다.

[특강 후기]

시설사회: 시설이 자연스럽고, 시설을 요구하고, 시설과 같은 사회

배성윤(서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시설사회='정상/비정상' 판별의 연속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회를 표현한다면 '어떠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를 규정하는 시도는 다양합니다. 김재형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를 '시설사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재형 교수의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근대 한국 사회에서 만연했던 '수용'의 모습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 병리를 '시설사회'라는 언어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시설사회란, 시설이 자연스럽고, 시설을 요구하고, 시설과 같은 사회라고 정의됩니다.

최근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사회의 반응은 기저에 흐르고 있는 배제와 격리의 작동을 여실히 드러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대로의 이행과 민주화가 이룩된 지금도 우리 각자는 여전히 또 다른 '시설'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대, 민주화와 더불어 시설사회라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함이 들기

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사회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국가의 보편적인 특징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강연은 시작됩니다. 현대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교정', '돌봄', '치료'라는 개념은 '통제'의 다른 이름으로써 그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규율이라는 부정을 넘어서 인센티브라는 긍정이 난무하고 있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경쟁의장에서 탈락된 채 성과를 발휘하리라고 기대되지 않는 이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회는 여전히 '수용'을 손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역사적 맥락 하에서 광복 이후 직접적인 폭력성 명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호와 사회/의료복지의 언어는 교묘한 사회통제의 이중체계를 낳았습니다. 즉 복지과 구호라는 법적 이상과 사회사업 체계라는 현실이 뒤얽혀 '합당한 통제'라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각종 시설들을 설립했고, 형제복지원은 그 과정에서 생겨난 비극적인 시설 중 하나로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식민지와 고도성장기를 거친, 한국적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김재형 교수가 바라본 국가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신매매국가'였습니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몸은 자본축적에 쓸모 있는 몸으로 거듭 전환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자활'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교육은 소수에게만 부여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수용자는 국가, 법인, 지역사회의 공모에 의해서 착취될 뿐이었습니다.

강연은 앞으로의 과제를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재형 교수는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과 수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때는 특정한 인구집단을 고립시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설에 대한 탐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즉, 지금의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정리와 함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설과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사회의 메스꺼움

개인적인 소감으로 형제복지원과 관련한 자원활동을 한 이후에 이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느낀 형용할 수 없는 찝찝하고 거북한 감정들이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명쾌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불현듯 스친 섬찝한 느낌은 내가 시설 밖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도 일종은 시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설사회가 끔찍한 까닭은, 그런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수용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언제나 그 기준은 임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수님이 강연 중 말씀하신 시설의 역설을 곱씹게 됩니다. 시설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쓸모 있는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식으로 낙인 찍은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비용을 들여서까지 격리하고 싶은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했고, 일상의 많은 순간에서 평범한 얼굴을 띠고 깊숙이 침투한 여러 배제와 고립, 그리고 격리가 떠올라 무서워졌습니다.

[소개합니다]

아그작아그작 쪽 쪽 쪽 츠빃 츠빃 츠빃

진실의힘 창립 때부터 손과 발, 온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는 유현미 회원이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로 이어지는 도시 텃밭 농사 이야기를 텃밭 시 그림책 <아그작아그작 쪽 쪽 쪽 츠빃 츠빃 츠빃>에 담아 냈습니다. 유현미 회원님으로부터 텃밭 농사로 책을 지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텃밭은 기후 재난의 현장이에요. 작년 봄에 비가 얼마나 안 왔는지,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통은 잘 알기 어려운데, 텃밭을 하면 절로 알게 돼요. 작년 봄에 두 달 넘게 비가 안 왔어요. 인간이 아무리 물을 열심히 줘도 비가 제때 안 오면 심은 것들이 제대로 못 자라요. 맥을 못 취요. 상추씨 심었는데 상추가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더 야생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 야생이 어디 있나'라고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텃밭에 야생이 있어요. 텃밭은 묘한 장소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노동이 개입되는 곳이면서도 흙이라는 품 안에서 작물은 물론 자연과 야생이 함께 피어나니까요. 풀이 절로 나고, 셀 수 없는 곤충들이 오고, 땅강아지 같은 땅속 생물도 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눈이 반짝 반짝해지죠. 마음은 촉촉해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한 뼘기 땅, 텃밭에서 만날 수 있어요.

텃밭 농사는 재미있고 힘은 조금밖에 안 들어요. 면적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지어도 될 텐데, 그 작다란 땅도 새까만 비닐 멀칭이 기본이에요. 비닐 씌우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살충제 같은

것도 많이들 쓰시고. 이맘때 봄 농사 시작할 때 텃밭 농장에서 우리 텃밭 위치를 찾기는 아주 쉬워요. 다른 텃밭들은 거의 다 비닐 멀칭을 해서 온통 까만데, 우리 밭만 땅색 그대로 있어서. (웃음)

텃밭 일지를 써요. 농사 기록이죠. 그림은 가능하면 그때그때 그리려고 하지만 쉽진 않아요. 시간이 모자라서! 텃밭에서는 그 작은 땅인데도 뭘 할 일이 그리 많은지. 마음이 동할 때 바로 그리지 않고 사진 찍은 것을 보고 나중에 그리면 뭐랄까. 그림의 맛과 멋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농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 제가 지은 책은 모자란 책이에요. 다만, 뒷북 치듯 정성을 다해 만들어요. 내가 꿈꾸는 최상의 책은 영원히 못 나오겠지요.

이 책에서 흙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작가의 말'에 쓴 글을 옮겨 볼게요. "진실을 말하자면 그림책 짓는 것보다 텃밭 김매는 것이 더 재미있다. 내가 돌본다고 하지만 내가 보살핌을 더 받는 곳. 작으나 큰 땅, 텃밭. 흙에 발을 디디고 몸을 움직여 밭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절로 알게 된다. 본디 모습인 흙 인간으로 복구된다."

2023 년 3 월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영숙 강용주 강은옥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곽경란 구미성 구종우 구혜임 권대우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나연 김남섭 김동민 김미경 김민희 김병선 김상훈 김선정 김성일 김소연 김순영 김시현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선 김유심 김은미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인수 김정애 김정우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익 김주영 김준성 김지은 김충례 김평호 김한수 김현무 김혜성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노복미 류혜정 맹명숙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보경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철홍 박충식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법무법인[유] 지평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순영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기 신동호 신상철 신진숙 심은정 심찬섭 안경호 안명옥 안점옥 양경희 양남훈 여연심 염은진 오현석 우한철 위정미 유승찬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경희 윤양희 윤택진 이근행 이기범 이미정 이민주 이성엽 이 옥 이옥란 이원식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정식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해림 이현주 이해선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정길동 정길화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하 정의로 정재홍 정정희 정종호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영 조미진 조은희 조일준 채수미 채옥희 채환규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정식 최종익 최진민 최진숙 최태욱 하인숙 하지훈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홍진아 황순규 황해지니